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부문 구조개혁 과제  
발제자 : 이건호 前 국민은행장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23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10월 13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이건호 前 국민은행장을 연사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부문 구조개혁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기술혁신은 자금 수요자, 금융기관, 자금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금 수요자는 생산기술의 변화에 힘입어서 자금을 가치로 변화시킨다. 금융기관은 업무처리 방식이 변한다. 자금 제공자는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바뀐다. 자금 수요자, 금융기관, 자금 제공자는 전달(delivery) 채널이 변화하고, 자산, 부채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술혁신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 부채, 새로운 채널과 감독체계가 만들어진다. 현재에도 디지털 기술이 금융 산업을 크게 변화시켰다. 미래에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금융 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 금융산업을 변화시키는 핵심기술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증이다. 현재 금융부문에 활용되고 있고,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기술들이다. 금융서비스는 신중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 이익 원천에 마찰요인이 잠재되어 있어서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받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금융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시킬지 이해하기 위해서 감독당국, 금융기관,

새로운 시장참여자들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으로 간소화된 하부구조, 인간의 도움이 고도로 필요로 하던 고급가치 활동의 자동화, 금융기관을 통한 중개 감소가 일어난다. 데이터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틈새시장과 특화 상품이 쉽게 만들어진다. 고객 권한도 확대될 것이다.

■ 기술혁신으로 금융시스템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긍정적 영향으로 금융시스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금융소외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맞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데이터가 전자화 되고 실시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들에게 노출되는 리스크를 감독당국이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하면서 최종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 간에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위기의 전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으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 기술혁신이 잠재적으로 리스크를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 소외 문제가 크게 완화되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제가 중요해진다.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객 데이터 소유권과 정보를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론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전달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된다. 잠재적 리스크 때문에 기존의 규제 시스템이 혁신의 발목을 잡거나 감독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에서는 창구와 규칙을 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현상에 감독당국이 미리 규정하기 힘들다. 새로운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인가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최소기준을 정해서 지도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규제를 정한다. 규제에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규제남발을 막아야 한다.

## ■ 제4차 산업혁명과 컴퓨터의 영향력

### : 인간의 영역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경제활동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만든 용어이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 정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에는 가상공간과 실물공간의 경계가 없어진다. 인간의 영역을 기계가 대체한다.

- 컴퓨터 개입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해서 인간의 미래를 개선한다. 범용적인 서비스밖에 제공할 수 없었던 산업들이 온라인 거래 구매이력, 대금지급 수단 선호도, 배송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개인적인 욕구에 최적화하고 이를 거래 방식에 활용한다. 실시간으로 실험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생산 활동에 적용한다. 컴퓨터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한다. 작은 기업들의 다국적기업화가 이루어진다. 작은 다국적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조직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기술혁신과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양상

### : 새로운 형태의 자산, 부채, 채널, 감독체계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금융 산업 탄생

-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이는 자금 수요자, 금융기관, 자금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금 수요자는 생산기술의 변화에 힘입어서 자금을 가치로 변화시킨다. 금융기관은 업무처리 방식이 변한다. 자금 제공자는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바뀐다. 자금 수요자는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이 변화하고, 자금제공자는 리스크·리턴 선호도가 변하게 된다. 자금 수요자, 금융기관, 자금 제공자는 전달(delivery)채널이 변화하고, 자산, 부채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술혁신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 부채, 새로운 채널과 감독체계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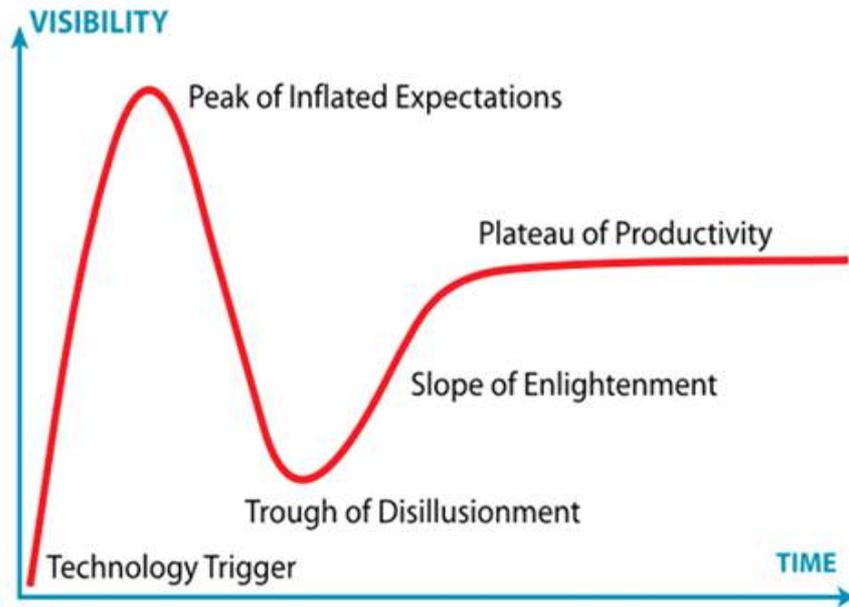
- 디지털 기술이 금융 산업을 크게 변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반도체의 거래기록저장기술로 신용카드가 만들어졌다. 컴퓨터 개발로 국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TM, 전자무역(Electronic Trading), 디지털뱅킹(Digital Banking)이 가능해졌다. 다양한 기술 발전들이 도구의 역할을 한다. 미래에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금융 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 과장광고 곡선(Hype Curve)으로 기술 발전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특정한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 기대도 급속하게 올라간다. 그 기술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과잉기대(Peak of Inflated Expectations)가 오른다. 정점을 찍고 나면 그 기술이 생각만큼 뛰어난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기대가 급하락(Trough of Disillusionment)한다. 그러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이점이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기대감(Slope of Enlightenment)이 생긴다. 기술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 기술을 활용해서 상용화(Plateau of Productivity) 하게 된다. 이렇듯 기술의 발달로 금융부문에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룩할 것 같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 ■ 금융산업을 변화시키는 기술혁신과 영향

### : 4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되는 금융부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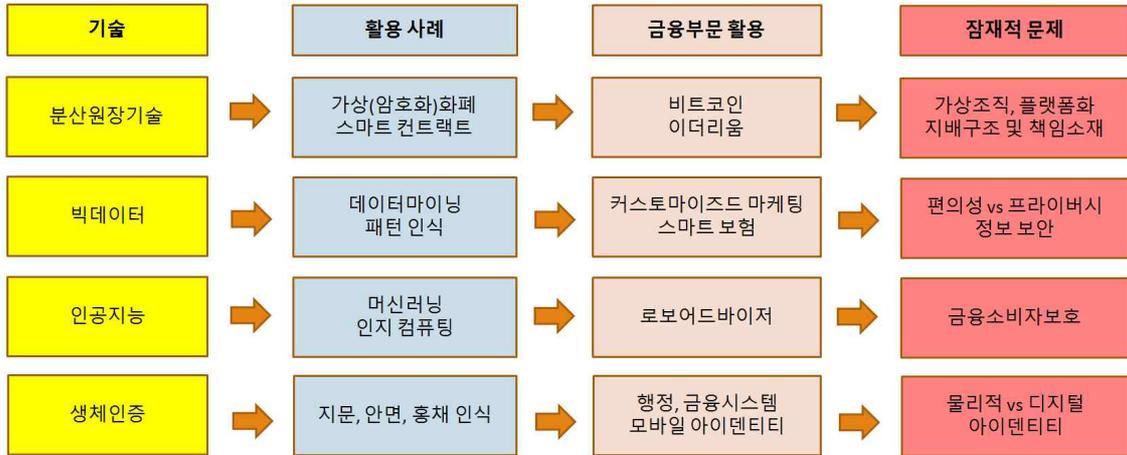
- 금융산업을 변화시키는 핵심기술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증이다. 현재 금융부문에 활용되고 있고,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기술들이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화폐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로 활용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실물화폐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액만 나타난다. 스마트 계약은 사이버 공간에서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계약상황과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으로 실현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조직, 플랫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조직이 없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배구조가 없어서 책임소재를 묻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과 패턴 인식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찾고 활용한다. 금융부문에서는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고객맞춤형 마케팅과 스마트 보험으로 활용될 것이다. 빅데이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소비패턴과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스마트 보험과 커스터마이징드 마케팅을 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편의성은 늘었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가능성이 있다.

- 데이터 마이닝이나 패턴인식을 기계한테 맡기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계가 공부하고, 정보를 모아서 미래를 계획한다. 이런 기술을 머신러닝, 인지 컴퓨팅이라고 하고, 금융부문에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로 활용된다. 기계가 과거의 정보를 취합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 생체인증 기술은 지문, 안면, 홍채 인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문인식은 행정, 금융시스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안면, 홍채인식은 금융권에 사용될 것이다. 모바일 아이덴티티로도 활용되고 있다. 물리적 아이덴티티가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 디지털 아이덴티티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표준이 없는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 금융부문 기술혁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금융서비스는 신중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 이익 원천에 마찰요인이 잠재되어 있어서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받을 것이다.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면서 자본의 소요가 적은 플랫폼 기반의 사업모델에서 크게 나타난다. 기존 사업모델의 와해가 은행 부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보험업에서 와해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경쟁자들과 경쟁하면서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와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하는 병행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금융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시킬지 이해하기 위해서 감독당국, 금융기관, 새로운 시장참여자들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은 장기적으로 고객의 형태, 시장 참여자들의 사업수행 방식, 금융서비스 산업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지속적인 압력이 된다. 기술혁신으로 간소화된 하부구조, 인간의 도움이 고도로 필요로 하던 고급가치 활동의 자동화, 금융기관을 통한 중개 감소가 일어난다. 데이터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틈새시장과 특화 상품이 쉽게 만들어진다. 고객 권한도 확대될 것이다.

- 기술혁신으로 금융시스템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긍정적 영향으로 금융시스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금융소외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맞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데이터가 전자화 되고 실시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들에게 노출되는 리스크를 감독당국이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하면서 최종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간에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위기의 전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으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 잠재적으로 리스크를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 소외 문제가 크게 완화되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투명한 거래, 단타성 거래, 투기성 거래로 유동성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제가 중요해진다.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객 데이터 소유권과 정보를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론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전달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된다. 잠재적 리스크 때문에 기존의 규제 시스템이 혁신의 발목을 잡거나 감독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 ■ 금융부문 구조개혁의 선결과제

### : 당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 당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강제적으로라도 줄여야 한다. 가계부문의 채권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시키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에서 신용위험노출액(Exposure)을 줄여야 한다. 가계부문을 대체할 적절한 자산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해외에 내국인이 자산을 축적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에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조선,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전자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공존하고 있다. 죽어가는 산업을 금융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 산업과 금융의 관계를 세우고, 기업 구조조정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 어떤 산업이 성공할지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립해야 한다. 각종 금융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영업 관행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금융기관이 선을 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부채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부채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창구와 규칙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에서는 창구와 규칙을 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창구나 규칙을 감독당국이 미리 규정하기 힘들다. 새로운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 ■ 금융규제의 발전방향

### : 기술발전이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규제의 발전 방향

- 금융당국은 인가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최소기준을 정해서 지도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규제를 한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기술혁신을 금융부문에 적용할 때 취약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사취행위(Electronic Fraud)를 방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범죄 의도나 재미로 공격하는 해커들로 인한 사이버 리스크(Cyber Risk)도 고려해야 한다. 핀테크(Fintech)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핀테크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실패에서 오는 운영상의 리스크와 외부 기술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에 따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 클라우드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부의 정책집행자 역할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공공정책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은 제2차 산업혁명기의 관행에 맞춰져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는 빠른 변화 속도와 광범위한 영향으로 입법자들과 규제당국이 전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핀테크는 규제의 회색지대가 될 개연성이 크다. 핀테크는 실체가 없다. 감독당국은 행위가 아닌 사업체를 상대하는데 익숙해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핀테크 규제에서는 규제 아비트라지(Regulatory arbitrage)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한다. 핀테크 상품들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 국제적으로 데이터 관련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윤리적 사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데이터 이전에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시기에 따른 금융규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술발전 초기에 과도한 규제는 기술혁신을 금융업에 적용할 수 있는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 과잉기대(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시기에 과도한 규제 완화는 개별기관이나 시스템에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 기대가 급하락(Trough of Disillusionment)되었을 때 과도한 규제는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서 금융산업 발전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정기(Plateau of Productivity)의 규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나 이미 성숙된 기술을 금융산업에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혁신의 의미가 없어진다.

- 현재 규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지연되거나 불법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P2P대출에서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은 ‘인가’가 필요해서 경쟁국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범하였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현행법상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의 위법성 혹은 거래자의 위법성을 띠고 있다.

- 기술혁신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에 기반을 둔 규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거티브규제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 미래기술과 금융산업

### :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술로 변화하는 금융산업

-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로도 자주 쓰인다. 분산원장기술은 금융거래를 간소화하여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분산원장기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안성이 꼽힌다.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고치지 못한다.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분산원장기술의 약한 고리는 아이덴티티 기술에 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해킹 사례는 분산원장기술 자체에서가 아닌 아이덴티티 도용에서 나타난다. 세계적인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Mt.Gox나 Ethereum, Bitfinex에서 해킹문제가 발발했다. 디지털에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중요 화두가 되었다. 물리적으로 신분을 활용하는 것

이 불가능할 때 사이버 공간에서만 적용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기준이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신분확인 시스템은 거래량, 거래의 복잡성, 고객 기대수준을 증가시킨다. 또한 엄격한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금전적 손실이나 명성의 훼손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강력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금융분야에 분산원장 기술을 실현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산업이 변화한다. 금융산업의 변화로 금융혁신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경제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업종 구분 자체로 불공정 경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포용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소외계층을 어떻게 줄여야하는지가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 234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신수종사업 육성이 국가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수종사업에 대한 투자, 대출제도 등 관행의 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개인이 기술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을 때 투자를 해주는 것이 벤처캐피탈이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 자금이 흘러가게 된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조직과 관리기준이 생겨난다. 운영 중에 투명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부작용은 정부가 개선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운영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시장 중심으로 벤처캐피탈이 꾸려져나가야 한다. 정부는 시장을 통해 벤처캐피탈에 자금지원을 해 주어서 자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조해주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에이전트를 다수로 놓고, 펀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질문2**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률이 나빠지고 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국내시장에서 은행의 마진이 좋지 못하다. 대한민국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마진은 세계시장 기준에 비해 낮지 않다. 대한민국 은행들간의 규제 때문에 마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일정하다. 은행들이 담합을 하지 않는 한 적정금리 수준으로 간다. 관에서 부당하게 금리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금리수준이 되기 힘들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진을 줄이려는 압력이 있었다. 한국은 수수료 수익도 낮다. 한국은 수표시스템이 없어서 수수료를 얻기 힘들다. 등기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한다. 한국에서는 은행이 비용도 못 받는 구조이다. 한국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는 보험과 펀드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 내부적으로 보험과 펀드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 약탈적 영업을 조장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은행이 수수료를 얻기 힘들다. 비이전수익으로는 은행 수익을 확대시킬 수 없다. 해외진출도 은행 수익을 개선시키기 힘들다. 후발 국가들에 진출한다면 진출해있

던 외국기업들과 경쟁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투자하여 경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금리가 바뀌어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했지만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해외진출 수익으로는 국내의 손실 충당이 어렵다. 자산운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자산투자에 힘써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